정책보고서 2006-8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노대명 신영석
이현주 이태진
박능후 손병돈
최승아 원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머 리 말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보다 많은 국민들을 실업과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빈곤율은 일시적 감소세를 나타내다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시점의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빈곤층의 증가라는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빈곤층 중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역할강화가 필요하지만, 지원방식에 있어 빈곤층의 역동성을 감안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 공공부조제도,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원함에 있어 선정·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층의 특성변화를 고려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욕구별 급여체계(또는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욕구별 급여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임대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등을 독립된 선정기준과 급여상한액을 가진 욕구별 급여체제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욕구별 급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적용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되었던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의 개편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수급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미취업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결합시킨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대명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는 신영석 연구위원, 이현주 연구위원, 이태진 연구위원, 최승아 연구원, 원일 연구원이 참여하고, 원외에서는 박능후 교수와 손병돈 교수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 연구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심으로써 연구결과를 보다 내실있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에 중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김미곤 연구위원과 김안나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 들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10
제3절 연구의 한계	12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구조	13
제2절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	16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7
제4절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새로운 과제	41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57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57
제2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75
제3절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88
제4절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103
제5절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및 시사점	126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에 대한 검토	137
제1절 급여체계 관련 규정	137
제2절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층상의 문제점	140

제3절 최저생계비 개편방안	151
제5장 개별급여체계 도입의 기본원칙	154
제1절 개별급여체계 도입의 필요성	154
제2절 개별급여체계의 기본구조	157
제3절 개별급여체계와 기타 복지제도	169
제4절 개별급여체계와 타 개편방안의 비교	173
제6장 주요 개별급여의 세부 개편방안	177
제1절 생계급여 개편방안	177
제2절 의료급여 개편방안	211
제3절 주거급여 개편방안	225
제4절 교육급여 개편방안	258
제7장 정책제언	266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266
제2절 정책제언	269
참고문헌	270

표 목 차

〈표 2- 1〉 생계급여수준별 수급가구비율	17
〈표 2- 2〉 특례범주별 수급가구	19
〈표 2- 3〉 현물급여 관련 공제현황	20
〈표 2- 4〉 주거유형	21
〈표 2- 5〉 주거유형별 주거급여종류	22
〈표 2- 6〉 주거형태별 주거급여종류	22
〈표 2- 7〉 주거형태별 주거급여액	23
〈표 2- 8〉 주거급여액 평균	24
〈표 2- 9〉 주거급여액 ANOVA 결과	24
〈표 2-10〉 주거유형별 주거급여액에 대한 Multiple Comparisons 결과	25
〈표 2-11〉 월세액과 주거급여부족액	26
〈표 2-12〉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 평균	27
〈표 2-13〉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 ANOVA 결과	27
〈표 2-14〉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와 수급가구 실질임대료의 비교('06년 기준) 29	
〈표 2-15〉 근로능력 여부	30
〈표 2-16〉 수급자 구분(개인)	30
〈표 2-17〉 수급자가구별 근로능력자 비율	30
〈표 2-18〉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취업상태	31
〈표 2-19〉 근로능력유무별 제외사유	32
〈표 2-20〉 근로능력유무별 조건부수급자 유형	33
〈표 2-21〉 자활사업의 취업 및 창업 성공률 추이(보정 I)	34
〈표 2-22〉 수급자의 연령별 건강상태	35

〈표 2-23〉 의료급여의 수급자 및 지출 추이	36
〈표 2-24〉 2006년 전체가구 대상 빈곤율 현황	48
〈표 2-25〉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52
〈표 2-26〉 근로빈곤층의 성별 취업상태	53
〈표 2-27〉 취업빈곤층의 종사업종(가구소비)	54
〈표 3- 1〉 2004년 미국의 빈곤분계선(Poverty Thresholds)	61
〈표 3- 2〉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 1995~2006	62
〈표 3- 3〉 빈곤지침(Poverty Guidelines) 적용 프로그램	63
〈표 3- 4〉 미국 각 주의 TANF 현금급여 수준	68
〈표 3- 5〉 New Jersey와 Nevada 주의 TANF 선정기준과 급여	68
〈표 3- 6〉 Food Stamp의 가구규모별 급여상한액	70
〈표 3- 7〉 EITC 급여 산정 기준 및 방식	73
〈표 3- 8〉 Income Support의 급여액(2006년 4월 현재)	81
〈표 3- 9〉 부가급여	82
〈표 3-10〉 주거비용	82
〈표 3-11〉 소득기초형 구직자 수당의 요율(2006년 현재)	84
〈표 3-12〉 Housing Benefit의 급여체계(2006년 4월 현재)	86
〈표 3-13〉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의 개인생계비	93
〈표 3-14〉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 공동생계비	93
〈표 3-15〉 아동수에 따른 월 급여액(2006년 현재)	95
〈표 3-16〉 가구구성별 급여신청 가능한 연간 소득상한선	98
〈표 3-17〉 주택수당 지출 추이: 1991-2002년	99
〈표 3-18〉 전체 주택수당 수급자 추이: 1991-2002년	99
〈표 3-19〉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	105
〈표 3-20〉 프랑스 최소사회수당(Minima Sociaux) 수급자 규모(2003년 12월 31일) ..	118
〈표 3-21〉 프랑스 주거급여 수급자 규모(2003년 12월 31일 현재)	121
〈표 3-22〉 프랑스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 규모(2003년 12월 31일 현재) ..	121
〈표 3-23〉 최소사회수당의 지급단위와 급여상한액(2005년 기준)	123

〈표 3-24〉	최소사회수당 선정시 사용되는 기준소득과 산정기간	124
〈표 3-25〉	RMI의 급여상한액과 균등화 지수	125
〈표 3-26〉	최소사회수당의 급여상한액(Montant)과 소득기준	126
〈표 3-27〉	각국의 노인, 장애인 대상 공공부조제도	128
〈표 3-28〉	유럽 각국의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의 특징	130
〈표 4- 1〉	최저생계비 비목과 기초보장법의 급여 종류와의 관계	143
〈표 4- 2〉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2006년)	144
〈표 4- 3〉	연도별 가구규모별 가구균등화지수	148
〈표 5- 1〉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비교	174
〈표 5- 2〉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기대효과 비교	176
〈표 6- 1〉	소득인정액 기준의 구성	179
〈표 6- 2〉	2006년 현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상한액	180
〈표 6- 3〉	생계급여의 결정방식	181
〈표 6- 4〉	가구별 생계급여액의 결정	182
〈표 6- 5〉	빈곤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율(가구기준)	183
〈표 6- 6〉	생계급여기준선 이하 가구의 비율 및 평균 생계급여 수급액	185
〈표 6- 7〉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시 빈곤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율	186
〈표 6- 8〉	생계급여상한액의 결정 방식	198
〈표 6- 9〉	생계급여의 구성 및 항목별 급여액의 예	199
〈표 6-10〉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 구분	212
〈표 6-11〉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법정 본인부담금 현황	217
〈표 6-12〉	의료급여 수가 기준 현황	217
〈표 6-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지원 시행규칙	231
〈표 6-14〉	2006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232
〈표 6-15〉	2004년 4인 가구 최저주거비(중소도시 전세기준)	233
〈표 6-16〉	면적기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240
〈표 6-17〉	가구구성별 필요 방수의 예	241
〈표 6-18〉	지역별 주택유형 비율	242

〈표 6-19〉 지역별 임대료	243
〈표 6-20〉 영국 St. Helens 지역의 주택규모별 표준임대료(2005. 12. 31)	244
〈표 6-21〉 실질임대료 기준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주로 처리)	245
〈표 6-22〉 최저주거비 기준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246
〈표 6-21〉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예산 변동 추이(수급자 대상)	253
〈표 6-22〉 차상위 주거급여 대상 규모	254
〈표 6-23〉 차상위 주거급여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254
〈표 6-24〉 교육부문에서 박탈가구 비율	262
〈표 6-25〉 소득구간별 교육부문 박탈을 활용한 판별분석결과 Wilks' Lambda	263
〈표 6-26〉 교육 소외 계층의 범주	265
〈부표 1〉 미국 각주의 TANF 수급기준 및 급여상한액	275

그림목차

[그림 2- 1]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저임금일자리	42
[그림 2- 2] 각국의 실업률과 빈곤율	43
[그림 2- 3] 각국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44
[그림 2- 4] 한국사회의 소득분배구조 추이(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46
[그림 2- 5] 한국사회의 빈곤율 추이	47
[그림 2- 6] 2006년 빈곤가구의 구성	48
[그림 2- 7] 빈곤동태성에 따른 빈곤층의 소득분포와 정책지원 방향	49
[그림 2- 8] 각국의 실업률과 근로빈곤층 비율	51
[그림 2- 9]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수준별 욕구결핍 정도	56
[그림 3- 1] 미국의 공공부조 구성체계	59
[그림 3- 2] 영국의 공공부조 구성체계	78
[그림 3- 3]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 구성체계	91
[그림 3- 4] 사회부조 수급권리 체계	100
[그림 3- 5] 하위 10% 가구 가처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급여유형별 비중	107
[그림 3- 6]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구성체계	110
[그림 3- 7]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수 추이	119
[그림 3- 8] 프랑스 장기실업자 및 실업부조 수급자 추이	120
[그림 5- 1] 개별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욕구대응성 강화	157
[그림 5-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부조제도 재구성(제1안)	163
[그림 5-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부조제도 재구성(제2안)	164
[그림 5- 4] 개별급여체계의 기본구성	168
[그림 6- 1] 생계급여의 구성	197
[그림 6- 2] 자산 규모별 급여수준	249
[그림 6- 3]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	252
[그림 6- 4] 소득분위별 주거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56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맞게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주요 급여의 개별화, 즉 개별급여체계의 도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전체 구성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와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구조는 아래와 같음.
 -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소득(=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통해 모든 급여의 수급기준과 급여상한액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급여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급여방식과 관련해서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리고 이것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실직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는 조건부급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기존 급여체계에서 현물 급여 중심의 개별화된 급여로 전환 될 경우 급여체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특례수급자임.
 - 특례가구는 전 수급가구 중 241,179가구로 2.9%임. 특례가구 중 의료, 교육, 자활 등 현물급여 관련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는 64.2%나 됨. 의료급여특례 및 의료급여를 포함한 급여특례가 약 38.7%에 이룸.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제도화되고 정착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별급여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조제도(SSI, TANF, Food Stamp, Medicaid, GA 등)의 경우 특정집단에 대한 범주별 부조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뉘고, 비기여형 급여는 다시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와 비자산조사급여(Non-means-tested Benefit)로 구분
 -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실업보험급여·질병급여·연금급여 등의 사회보험, 의료·교육·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서비스, 주택수당, 그리고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주택수당과 사회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함.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에는 매우 높은 가입율의 사회보험제도와 매우 독특한 가족수당제도(인구학적 조건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과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자산조사형 수당으로 구분), 보편적 교육·주거·의료서비스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됨. 따라서 프랑스의 공공부

조제도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계급여제도와 욕구별 급여제도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처럼 개별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은 각각의 급여제도를 독립된 선정기준과 급여상한액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 욕구충족성 등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서구 복지국가에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움.
- 미국과 프랑스는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또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상한액을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상 급여의 개별화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급여체계 관련 규정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는 이른바 통합급여체계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통합급여체계는 법적 논거를 가진 급여체계가 아니며, 제도를 운용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생겨난 급여체계로 판단됨.
- 최저생계비와 직접 관련되는 규정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인데, 이에 대한 어떤 해석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명백한 기준은 법 제7조제2항 전단과 후단이 논리적으로 상호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임.
 - 다시 말해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생계급여 + 가구특성별 필요급여」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임.

(2)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상의 문제점

- 현행 최저생계비는 빈곤선이면서 곧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이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시행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빈곤선으로서는 너무 낮다는 주장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서는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매년 부딪히고 있는 것임.
- 실제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은 표준가구의 일상적 소비생활을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욕구를 “규범적”으로 설정한 다음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이 모두를 다시 결합함.
 - 이 과정에서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괴리 현상>, <욕구간 완전대체재 관계 가정의 오류>, <일률적인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의 오류> 등의 논리적 오류가 발견됨.
- 공공부조 급여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 혹은 최저생활비를 사용하는 외국의 예는 일본 외에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최저생활비는 가구 특성별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금액만을 담고 있으므로 이것이 곧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것임. 반면 최저생활비를 빈곤선으로 사용하지는 않음. 따라서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구하지 않음.

(3) 최저생계비 개편방안

-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정책적 사항은 최저생계비를 빈곤선 개념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 개념으로 양분하여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임.
- 현재 시행 중인 통합급여체계는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욕구별 분리급여체계의 운용이 가능함.

- 욕구별 분리급여체계로 가려면 먼저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 가구특성별 필요급여」로 재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욕구별로 최저보장액을 계측하여야 함.
-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 가구특성별 필요급여」로 재구조화하게 되면 각 급여별 계측방식을 달리하여야 함.
- 이 경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계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소비수준의 일정 비율을 최저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임.

5. 개별급여체계 도입의 원칙과 개편방안

- 개별급여체계의 원칙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욕구충족에서 개별화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욕구충족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개별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생계급여 및 제반 급여의 수급자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조건부과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기타 개별급여는 수급선을 빈곤선보다 높게 설정하되, 욕구의 존재를 부가적 수급기준으로 부여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욕구보장>과 <준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욕구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 개별급여제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는 독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상한액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각 제도의 개편방향은 아래와 같이 설정
 - 주거급여는 월세 및 전세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담당하는 제도로 발

전하고, 주거복지정책 전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임

- 의료급여는 의료욕구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적절한 의료보장과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급여와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욕구에 따른 급여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자활급여는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립시키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규정은 유지하여 참여를 허용.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직권주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자활사업 참여자는 신청주의를 적용하는 이중의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하게 됨.

□ 각 급여별로 급여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추진

- 생계급여는 표준가구로 통합된 가구원 특성별 지출금액을 분리 계측하여 급여에 적용
- 주거급여는 지역단위의 표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급여
- 기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은 급여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

□ 현재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부분급여체계와 개별급여체계가 존재하며, 개별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은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급여의 욕구충족성과 욕구대응성을 높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간 외에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강점을 가짐.
- ‘중장기적으로’ 공공부조제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측면의 강점을 가짐.
- 급여수급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집중되고 그것이 전체 급여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반효과를 최소화하고, 복지의

존성을 해소하는 강점을 가짐.

- 개별급여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행정적 운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개별적인 업무담당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효율화될 것임을 시사. 또한 최근 주민생활서비스지원체계의 구축은 개별급여의 도입을 용이하게 할 기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6. 정책제안

□ 개별급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 2007년은 개별급여체계 도입에 필요한 급여 상한액과 수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에 주력
- 2008년은 개별급여체계의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정·급여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